

美, 기후협약 탈퇴시사, EU,日 강력반발 파장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7년에 체결된 '교토(京都) 기후협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유럽 연합(EU)과 일본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난 3월 28일 이 협약 이행 거부 방침을 재고하라는 서한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29일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EU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EU 환경담당 집행위원회 이날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밝히고 미국이 7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회의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사카이 가즈오 일본 담당 대사는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려는 의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에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부시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제된 기후협약이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성과를 가져올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교토 기후 협약을 사실상 탈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대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들도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놓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日, 환경배려제품에 JIS 기준 설정키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품이나 재이용품 등 환경배려 제품에 대한 기준을 일본공업규격(JIS)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품질, 제조방법, 품질측정방법 등에 대한 통일규격을 설정하여 각 기업들이 규격에 맞는 제품에 대해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한 JIS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환경 JIS"의 도입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각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이나 자원순환에 효과적인 제품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일본공업표준조사회(경제산업대신 자문기관 標準部會) 하에 자동차 등 업종별 26개 기술전문 위원회와, 환경, 자원순환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며, 이들 각 위원회에서 오는 6월말경까지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최종적으로 JIS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또 이를 국제표준화 기구(ISO)에 제한하여 일본의 규격을 국제기준으로 삼는 것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다.

환경 JIS는 1) 재생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은 일반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요구되는가, 2) 어느 정도 재생소재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는가, 3) 재생품 등의耐用性和 그 측정방법 등에 관해 기준을 제시하게 되며, 구체적인 규격은 제품분야별로 결정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재이용 가능한 부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재이용 가능률"의 산출방법이나 목표치, 범퍼 등 재이용을 전제로 한 부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규격을 정하게 된다. 또 차일드 시트(Child Seat)에 관해서는 소비자들로부터의 요구가 많은 貸出制度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이용하여도 견디어 낼 수 있는 품질이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도 결정하게 된다.

건축토목 분야에서는 리사이클 재료를 사용한 건설자재의耐用性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특히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JI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환경 JIS의 도입으로 환경배려 자재의 이용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 종이에 관해서는 古紙 함유율의 산출방법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 JIS규격의 검토대상 항목

- 화학 :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등급규격
- 종이 : 古紙 함유율 산출방법
- 금속 : 리사이클을 고려한 鐵, 알루미늄 등의 분류규격
- 자동차 : 재이용, 재조립부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시험방법
- 전기전자 : 가전제품, OA기기 등의 재이용, 재조립부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시험방법
- 건축토목 : 리사이클 재료를 사용한 건설자재

**日, 자연에너지 개발 촉진 위해 「그린 증서 제도」 도입키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에 의한 발전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 경제 산업성은 지난 3월 26일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발전 사업자에게 자연 에너지인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그린 증서」를 발행하여 전력 소매 사업자에게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그린 증서 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증서의 도입과 함께 일본 정부는 증서의 거래 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발전 사업자는 증서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전력 소매사업자는 시장을 통해서 증서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린 증서는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자연 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발행한다. 정부는 전력 소매 사업자에 대해 연간 전력 판매량의 3%정도를 자연 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만큼에 상당하는 증서를 보유하게 할 것이라고 정부에 보고하였다. 자연에너지 보유 의무량을 초과 생산하는 전력 회사는 남은 증서를 거래 시장에 매각하거나 전력 소매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소매 사업자는 스스로 풍력 또는 태양광 등을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하여 증서를 발행 받거나 풍력 발전 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과 증서를 구입할 수 있으며 거래 시장에서 증서를 구입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서를 입수할 수 있다.

**캐나다, 대기 오염 정도 알려주는 웹 사이트 선보여**

대기 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반가와 할 만한 환경 관련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우편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대기의 유해 물질을 분석해 주고 이러한 유해 물질 방출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기업들까지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새롭게 선보인다고 『글로브 앤 메일』紙가 보도했다. 캐나다의 대표적 환경 단체 3개가 50만 캐나다 달러(32만 미

국달러)를 투자해 지난 10일부터 선보인 이 서비스는 미국에서 실시된 비슷한 서비스를 모델로 한 것이다. 미국 내 환경 운동가들은 이와 같은 유의 미국내 사이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반(反)환경친화적 기업들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3월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 사이트의 후원 단체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 환경법 협회"의 폴 멀튼은 "이런 의미에서 이는 것이 힘이다"라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외에도 "캐나다 환경법 및 정책 연구소"와 "환경 보호 기금"이 이 사이트를 후원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환경 캐나다(Environment Canada)"로부터 오염 물질 방출 기업들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사이트의 주소는 [www.pollutionwatch.org](http://www.pollutionwatch.org) 이다.

**대만, 환경친화적 도시로 변모**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3개월 앞두고 대만을 립픽위원회가 최근 중국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우징궈(吳經國) 전 대만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정찰기 사건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개최 도시)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오는 7월13일 모스크바의 IOC 총회에서 실시되는 차기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투표에서 중국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모스크바 총회에 참석할 127명의 IOC 위원들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판단해 베이징시에 투표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베이징시가 지난 93년 2000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시드니에 두표 차로 아깝게 패배한 뒤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178억달러를 들여 베이징시와 교외를 단장하고 120억달러 예산을 추가 편성, 환경친화적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달 미 하원은 중국이 정지범을 전원 석방하고 인권 탄압을 중지하지 않는 한 베이징이 올림픽 개최권을 따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